

정부에게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기록·보존할 유엔 「현장기반 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유치를 강력 촉구한다.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 반인도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엔 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사무소(field-based structure)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동 결의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 대표사무소는 탈북자 조사를 주임무로 하는 사무소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였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유엔 현장기반 사무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정부의 위와 같은 태도를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특정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실천 가능한 합의 및 신뢰를 이끌어가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로 판단한다.

이번 정부의 태도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 진행이라는 특정 상황 또는 사업에 매몰되어 국제사회의 합의인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대한민국 정부가 정작 북한인권 결의안의 실행 단계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

서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변은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단순히 북한의 시혜에 따른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엄중한 북한인권 문제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가 교류협력을 이유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무시하였다가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개선에도 실패하였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현장 사무소와 같은 국제기구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고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우리 정부가 온 국민과 더불어 이 조직을 한국에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